

2. 주요 업종별 통상 이슈 분석(3)-반도체

□ 관련 통상 이슈

현재 반도체산업에서는 외국의 반독점법 역외 적용 문제가 잠재적인 이슈로 등장. 반덤핑 문제, 현대-LG 합병 과정에서의 정부 보조금 문제도 잠재적인 이슈

- (반도체산업의 통상 이슈)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잠재적인 통상 이슈로는 반독점법의 역외적용 문제, 반덤핑 문제, 보조금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현재 통상 문제와 관련하여 현대와 LG 합병에 대한 외국의 반독점법 적용 여부가 잠재적인 이슈로 등장해 있는 상황임
- 이외에도 미국과 EU에서 반덤핑이 계속 문제로 되고 있으며 합병 과정에서 보조금 성격의 정부 지원 유무가 감시의 대상으로 되고 있음
- 아직 반도체와 관련된 새로운 통상 압력의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압력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것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그 피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반독점법 적용 문제

현대, LG 양사의 규모나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면 주요 수출국에서 신고 대상에 해당. 그러나 반독점법의 적용은 정부 차원의 판단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설득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을 전망이다

- (반독점법 내용) 대부분의 나라들이 반독점법을 통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음

- 미국과 EU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반독점법을 운용하고 있음
- 기업결합이 비록 외국회사들 사이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국내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그 나라 반독점법의 적용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임
- 반독점법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기업끼리의 합병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 신고 후 그 합병이 경쟁제한적인지 여부를 따져 그대로 승인을 해주거나, 제약

- 을 가한 제한적 승인을 하거나, 불가 판정을 내리거나 함
-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매출 또는 자산이 1억불 이상인 경우가 신고 대상이며 경쟁제한 여부의 판단 기준은 시장지배력의 증가 여부, 시장 진입/퇴출의 용이성, 합병으로 인한 효율의 증대 여부 등임
- 현대와 LG간의 합병은 양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건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신고 대상에 해당함

- (전망과 대책) 반독점법의 적용은 정부 차원의 판단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상대국 정부에 대한 설득 노력이 필요함

- 반독점법은 대개의 경우 각국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분위임
- 특히 최근 보잉사와 맥도널 더글러스사의 합병, 클라이슬러사와 다임러 벤츠사의 합병, 모빌사와 엑손사의 합병 등 대형 기업들 사이의 합병이 급증하고 있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합병에 대해선 수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
- 특히 미국의 경우 반독점법 위반이 외국 정부의 강제에 의한 경우에는 반독점법상의 책임을 묻지 않았던 판례(1970년 Interamerican Refining Corp. 와 Texaco Maracaibo Inc.의 합병건)도 있음
- 따라서 현대와 LG의 합병이 시장 지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설득한다면 문제 삼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의 불가피성을 미국이나 EU 등 주요국에 직접 설명,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함

□ 반덤핑 및 보조금 문제

작년 제기되었던 반덤핑 문제는 큰 피해없이 결말이 나고 있으나 여전히 상시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현대-LG 합병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이 감시대상이 되고 있어 주의를 요함

- (반덤핑 문제) 작년 미국과 EU에서 제기되었던 반덤핑 문제는 큰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결말지어졌으나 잠재적 문제 발생 가능성은 상존함

- 지난 1998년 9월 미 상무성이 제 4차 반덤핑 연례재심에서 현대와 LG에 대해

- 각각 3.95%, 9.04%의 덤핑마진 관정을 내렸음
 - 비록 WTO에서 미국의 반덤핑 철폐 관련 규정 및 한국산 DRAM 반덤핑 철폐 거부 결정이 WTO 반덤핑 협정을 위반했다고 시정 권고를 내렸지만, 미국에 대해 현 반덤핑 조치를 철폐하라는 직접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음
 - 현대와 LG가 합병함으로써 어떤 덤핑마진을 적용할 것인가가 의문사항으로 등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인수한 측인 현대의 3.95% 덤핑마진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지난 1998년 7월 유럽전자부품협회(EECA)의 한국산 D램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EU집행위원회가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제소는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음
 - 올해 5월부터 미국에 의한 제 5차 반덤핑 연례재심이 시작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EU에서도 유럽전자부품협회가 제소 기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어 지속적인 준비와 설득이 필요함
- (보조금 문제) 한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지원 여부가 외국의 중요한 감시대상이 되고 있어 현대와 LG의 합병시 신중한 접근 요구됨
- 1998년 11월 유럽전자부품협회(EECA)는 EU집행위의 제소 기각조치를 비판하면서 IMF 지원 자금이 한국업체의 손실과 구조조정 비용의 보전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함
 - 미 무역대표부(USTR)는 1999년 2월 발표된 보조금 감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부지시대출과 대기업 빅딜을 주의깊게 감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할 것임을 강조
 - 현대와 LG의 합병에서 부채의 출자전환이나 취득세 등의 감면 등은 보조금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김창욱 cwkam@hri.co.kr 2724-4044)